

쌀생산의 경쟁력 확보와 경지정리사업

유 혁 우
(한 국 농 공 학 회 부회장)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처 장)



우리농업은 WTO체제의 확립에 따른 산업간,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곡물, 육류 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등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이 외국으로 부터 밀려들고 있고 우리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인 쌀도 2004년 부터는 현재의 MMA 물량인 4%에서 보다 큰 폭으로 개방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촌지역의 인구가 '96년 현재 약 470만 정도로 전체인구의 10% 정도로 줄어 들었고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비중이 줄어들어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공장, 택지 등의 토지 수요로 농지가 년평균 약 30,000ha씩 줄어들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영농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
- 곡물의 자급율이 점차 떨어져 26.7%에 불과하고 몇 년전 까지도 자급율 10%에 소비 촉진을 장려하던 쌀도 현재는 자급율이 90% 정도로 떨어졌다.
- 농업인중 50세 이상의 비율이 1966년 18.7%에서 1966년에는 46%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 농업인의 대다수가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조상때부터 해오던 일을 마지못해 하는 식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

위와같은 여러 가지 우리농업이 안고 있는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주곡인 쌀의 자급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농업인들이 정부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영농을 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지를 첨단, 과학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첫째, 사업의 수준이 대폭 향상되어야 한다.

도로, 항만, 철도 등 여타 국가기반시설은 국가의 경제력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사업의 질적 수준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의 경우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영농비 절감을 도모하기엔 턱없이 미흡한 과거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농민들의 사유지인 농지에 정부가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원인으로 판명되나, 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타용도의 토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토지가격의 격차는 엄청나서 농민들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할 수준의 농지정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 불균형시의 국제양곡상인의 농간에 대비하고 식량을 안보 차원에서 확보하며, 통일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하여 농지의 기반정리는 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과학영농, 첨단영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벼농사의 경우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주작업은 90% 이상의 기계화가 달성되었으나 규모의 영세성, 기반정비 수준의 미흡등으로 쌀의 생산비가 국제시장가격보다 4-5배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농지의 기반정비 수준을 높이고 영농편의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약 50%의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우리나라의 정서, 즉 국내산 선호 경향을 감안 하면 충분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육묘에서 부터 수확까지 일관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영농기반 구축

-미곡종합처리장, 가공공장, 집출하장 등의 시설 설치

-공동작업, 위탁영농, 기업영농이 가능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즉, 구획을 대형화 하면 약 13%의 농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공동이용시설부지를 조성하여 미곡종합처리장, 가공 및 운반의 편의를 위한 집출하장의 설치 등의 개선을 통하여 약 30%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셋째, 영농규모의 확대가 시급하다.

200ha이상의 대규모 영농규모를 갖춘 외국의 농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추진해야될 과제는 영농규모의 확대이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지유동화사업,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은퇴농민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애착심등으로 인하여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방법으로 영농과 소유를 분리하여 소수의 전문영농인이 영농을 전담하고 유희인력은 타산업에로의 투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구획의 대형화와 용배수로 등의 시설을 현대화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전에 노동력의 부족, 영농후계자의 부재 등 영농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공동영농, 위탁영농, 기업영농 등이 가능하도록 쌀생산조직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조성을 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농지소유규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는 분산된 통지를 한군데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농민들의 의향을 조사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반대하는 농민들을 설득하여 사전환지를 통한 농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지형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현대화된 용배수시설, 도로와 첨단 영농지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용배수로의 관로화를 검토하여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용수의 절약과 감보면적의 절감을 도모한다.

-용배수시설의 자동화 및 과학화를 통하여 적기, 저량의 용수 및 배수로 생산량의 증대를 도모한다.

-평야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등 지대별로 알맞는 사업의 내용, 수준 및 방향을 설정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경지정리사업은 국민식량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써, 공장시설이나 도로 등의 시설이 시간이 지나면 보강, 보수를 하여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듯이 사업시행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재개발을 하여 그 시대에 맞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신규사업의 시행시에도 타국가기반시설의 수준에 대등한 수준으로 시행되어야만 쌀생산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 하리라고 생각한다.